

# 벼랑 끝 기업들...부채·부도 증가 속도 '세계 2위'

## 국제금융협회 3분기 34개국 통계

우리나라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통화 긴축과 고금리 기조에 국내 기업들의 부채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도 증가율 또한 세계 2위 수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대출로 위기를 막기에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부채 비율 126.1%...3개월만에 5.2%p ↑ 1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비(非)금융 기업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126.1%)은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을 웃도는 나라는 홍콩(267.9%)과 중국(166.9%) 뿐이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2분기(120.9%)보다 5.2%포인트나 뛰어 3개월 만에 싱가포르를 제치고 3위로 단 한계 올랐다. 이 증가 폭은 말레이시아(28.6%포인트·58.3→86.9%)에 이

부채 비율 5.2%p '평균'...부도 증가율 40%로 네덜란드 이어 2위 GDP 웃도는 가계부채 '4년째 불명예 1위'...1.5%p 하락 100.2% 이달 5대은행 가계 3.5조·기업 2.1조 또 늘어...30일 금통위 주목

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작년 3분기(120.4%)와 비교해도 5.7%포인트 더 높아졌는데, 1년 사이 증가 속도 역시 러시아(13.4%포인트·68.2→81.6%)와 중국(8.6%포인트·158.3→166.9%) 다음으로 세 번째였다.

세계적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거꾸로 높아진 나라는 이들 세 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5.5%포인트), 인도(+2.6%포인트), 베트남(+2.5%포인트) 등 9개국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3위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고금리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이하게 매우 빠르다는 뜻이다.

더구나 IIIF는 한국을 포함해 주요 17개국의 기업 부도 증가율(올해 들어 10월까지·작년 동기 대비)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는 약 40%로 네덜란드(약

60%)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비교 조사 대상 국가는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스페인·스웨덴·덴마크·튀르키예·캐나다·일본·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

IIIF는 보고서에서 "특히 유럽 등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은행이 민간 부문 대출을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 사이에서 취약성 증가의 징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기업 부도 건수 증가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비율 100.2%, 4년째 1위 불명예=가계부채의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율이 3분기 기준 100.2%로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래 거의 4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전체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나라였다.

한은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경고했는데, 8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95.2%), 태국(91.5%) 세 곳뿐이었다.

다만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101.7%)와 작년 3분기(104.8%)보다 각 1.5%포인트, 4.6%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3분기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사실을 고려하면, 경제 규모(GDP) 성장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은행 기업 대출자·대출액 최대=더구나 경제 규모를 크게 웃도는 한국 민간(가계+기업) 부문의 신용(빚) 규모는 4분기에도 계속 커지는 추세다.

이달 16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9조5581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과 비교해 약 3조 4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가 아닌 기업(대기업+중소기업 포함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현재 766조3856억원으로 집계됐

다. 역시 지난달 말보다 2조696억원 더 늘었다.

작년 말(703조7268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서만 5대 은행의 기업 대출은 62조6587억원 급증한 상태다.

특히 기업 대출의 경우 연체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자는 350만명, 이들의 대출잔액은 1262조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기업대출자의 연체 대출액(1개월 이상 연체 원리금 기준) 잔액은 4조7000억원으로 2019년 3분기(5조1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고, 연체율도 0.37%로 2021년 1분기(0.37%)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먼저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프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 “연금개혁 없으면 정부 부채 50년 뒤 GDP의 2배”

### IMF 연례협의 보고서...“직역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고려 가능”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이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채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보고서에서의)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낮추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고령화에 따라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낮은 소득 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지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조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김동철(왼쪽) 한전 사장이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 한전 김동철 사장, UAE 바라카원전 건설현장 방문

한국전력은 김동철 사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UAE 바라카원전 건설현장을 방문,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사장은 상업운전 중인 바라카원전 1·2·3호기를 점검하고 지난 5월 건설역무를 완료하고 가동준비에 착수한 4호기의 연료장전 준비 현황을 살폈다.

같은날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 UAE에서 수행 중인 HVDC 해저송전망 건설현장을 찾았다.

해저송전망 사업은 한전이 큐슈전력 및 EDF와 함께 진행중인 공사로, 바라카 원전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를 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UAE의 해상 원유수출 시설에 공급하게 된다.

현장을 점검하면서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 사업주로 참여하여 삼성물산이 시공을 담당하는 팀 코리아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진행중인 후속 그리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 사장은 지난 17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을 만나 한-UAE간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김 사장은 UAE에 이어 잠재 원전도입국인 영국으로 이동해 오는 24일까지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19일 광주신세계 직원이 분관 1층 이벤트홀에 마련된 팩토리 스토어 시즌2 행사장을 찾은 고객에게 여성리플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신세계 “해외 유명 브랜드 최대 80% 할인”

26일까지 팩토리스토어 시즌2...패션·잡화 등 100여개 참여

로또복권 (제109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7	15	22	26	4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12,854,469	12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48,571,368	87
3	5개 숫자일치				1,550,719	2,725
4	4개 숫자일치				50,000	136,802
5	3개 숫자일치				5,000	2,278,728

광주신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팩토리스토어(FACTORY STORE)’ 시즌2 행사를 진행한다.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외 패션, 잡화, 남성·스포츠, 여성·아동, 라이프 스타일 상품들을 30~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팩토리 스토어는 신세계백화점이 직접 큐레이팅한 100여개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사다.

팩토리스토어 시즌2는 지난 6월 첫번째 팩토리스토어에 이어 20여개의 브랜드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프라다와 비비안웨스트우드, 토리버치, 에트로, 톨브라운, AMI(아미), 스투시, 칼하트, DKNY, 무스너를, 맥게이지, C.P. 컴퍼니 등 해외 패션 브

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특히 무스너를, C.P. 컴퍼니, AMI(아미) 등 인기 브랜드의 가을·겨울 상품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또 아웃도어 프로덕츠, 바소, 케츠 등 남성·스포츠 브랜드와 오르시메, 지프·베네통·올리반 키즈, 말리푸리, 플리츠미, 숲, 밀린그레이, LAP(랩), 해피버스, 윈더플레이스 등 다수의 유명 여성·아동 브랜드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오르시메, 올림피아, 헬레나크리스티, 제로캐리어, 파시에라, 마이마스 터즈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연말을 맞아 프라다, 코치, 토리버치, 마이클코어스 등 10여개 브랜드의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눈에 띄는 특가상품으로는 ‘페라가모 1898 스포트 콤팩 메탈 남성 시계’로, 진열상품을 75% 할인된 42만2500원에 5개 한정 수량 판매한다. 또한 발리(BALLY) 남성가방 ‘TIGAN O 브리프케이스’ 제품을 20개 한정, 56% 할인한 45만원에 선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국회 통과 시급한 법안은 ‘중대재해법’”

### 중소제조업 설문

중소제조기업들이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2~13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 기업의 47%로 다른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았다.

중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뽑은 응답자 비율은 37.7%였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을 지목한 응답자 비율

은 29.7%로 집계됐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에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의 응답 비율이 29.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가 뒤를 이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는 노동규제(44.7%)가 꼽혔다. 뒤이어 이어 환경규제(25.3%) 인종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승계 관련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법), 화학물질관리법(화학법) 등은 중소기업에 걸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오피스텔에 어린이집·경로당 만들기 쉬워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오피스텔에도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어린이집 등 주민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는 완화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16층 이상일 때 층수와 관계없이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